

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 UR협상과정에서 우리쌀을 지키기 위한 국민적 논란과 외교적 협상으로, 그래도 쌀은 2004년까지 전면적 개방이 유보되었고 최소시장접근에 의해 매년 일정량씩 수입하게 되었다.

세계무역기구의 출범에 따라 무역질서는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으며 최소시장 접근에 의해 수입될 물량은 96년에는 80만석으로 전망된다. 쌀의 자급도는 91년의 102.3%를 정점으로 매년 떨어져서 95년에는 91.4%, 96년에는 92.2%로 전망된다.

95년 수확기부터 산지쌀값이 계속 상승하여 급기야 수매가격수준에 접근되었으며 최근 95년산 수매곡 공매로 어느정도 약보합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산지 쌀값은 전년 수확기에 대비하면 8.4%나 상승된 수준이다. 현재 산지 쌀값은 80kg가마당 13만3천원이고 소비자가격은 14만5천원이며 이러한 현상으로 금년도 수확기에는 정부수매가격을 올리지 않는다면 정부가 필요로 하는 비축물량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는 것이 양정당국의 고민이다.

양정개혁추진 ... 민간유통 활성화 여건조성

지난 93년 8월 정부는 양정전반에 대한 과감한 개혁을 추진, 정부의 관리방식에서 벗어나 세계무역 질서에 맞추면서 우리 실정을 과감하게 반영하고 있다. 과거의 양정이 생산자나 소비자 그리고 정부의 입장을 곤혹스럽게 하였던 때문에 현실성있게 양정개혁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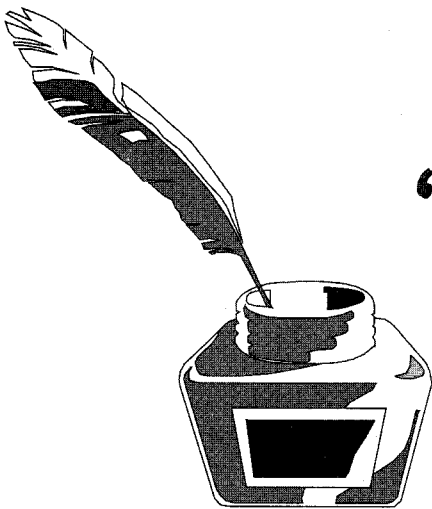
즉, 그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던 정부수매와 민간유통기능의 조화를 통하여 쌀 생산농가의 실질소득을 지지하고, 과거 쌀 부족시대에 도입된 방출제도를 시장원리에 맞는 제도로 전환하고, 양곡증권에 의존하고 있는 양곡관리기금운영체계를 재정지원에 의한 새로운 회계방식으로 개편하여 양곡적자의 누적문제를 시정한다는 것이 양정개혁의 기본 방향이다.

구체적으로 정부의 양정개혁 추진내역을 보면, 쌀값의 계절진폭을 수확기 산지가격을 기준으로 이듬해 단정기에 10%, 수확기에 3%범위내에 허용하여 민간상인의 쌀보유동기를 부여하고, 농협공매물량과 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농협수매물량에 대해 차액지급제를 실시하여 민간유통이 활성화되도록 여건을 조성한다는 것이다.

정부미 방출방식도 농협을 통한 방출과 시장원리에 의한 공매제를 실시하여 정부방출가를 현실화하며, 양곡관리기금 운영방식을 개편하여 양곡관리기금을 폐지하고 양곡사업을 양곡관리특별회계로 일원화한다는 것이다.

편집위원 칼럼

양정여건과 방향



“다시 통일벼를 심자”

자급기반 갖춰야 양정난제도 해결가능

쌀은 국민경제 측면에서 아직도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쌀문제는 국민경제에서 중요한 관심사로 논의되고 있다. 쌀은 농가경제에서 주소득원이다.

94년 기준으로 쌀은 농가소득의 19.9%, 농업소득의 39.2%나 된다. 전체 농가의 82%인 1백26만6천호가 쌀 농사를 짓고 있으며 전체 농경지 2백3만3천ha의 52%에 벼가 재배되고 있다.

소비면에서도 쌀은 국민식량의 중요한 공급원으로 에너지 공급량의 39.8%나 된다. 도시가계비중 쌀 지출비중은 3.0%로 감소되고 있으나 수자원보호, 환경보존등 국민경제의 기능은 높다.

그러나 쌀을 중심한 양정여건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맞고 있다. 95년부터 WTO체제가 출범하면서 추곡수매를 통한 보조금을 매년 7백50억원수준으로 2004년까지 감축해야 하며, WTO에 제출한 우리나라 농산물이행계획서대로 보조금을 삭감해야 WTO보조금 범위 내에서 매년 36만석 수준의 수매량 감축이나 수매가조절이 필요하게 되어있다.

이런 계획에 따라 96년도 추곡수매예산은 9백20만석 수매분이 확보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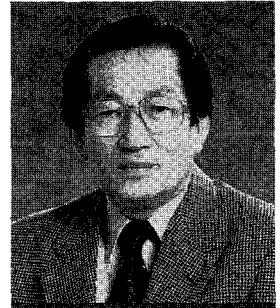
대내적으로는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가 보유 쌀값을 적정하게 유지하고 95년산 쌀값 계절진폭이 15.1%에 이르게 되어 상인들이 산지쌀을 보유하려는 동기가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대농들은 출하를 조절하고 있어 양질미 생산지역 산지쌀값이 수매가를 상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정부미 수매물량을 확보하는 계획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현실적으로 수입개방에 따른 실질농가 소득의 감축과 소득원개발이 제한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이든 농가소득을 보전할 수 있는 직접지불제도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농민 입장이다.

직접지불제도는 정부가 농산물 가격지지대신 농가에 보조금을 직접 지불함으로써 농가소득을 보장하는 것이다.

96년도 예산에도 농기계구입보조, 부채정감, 농어가 학자금지원, 농어업인 연금지원, 자연재해지원등 1조4천억원 정도를 계획하고 있으나 농민들은 직접적이고 강도 높은 부문을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래서 정부는 직접지불제도에 대해 다양한 시책개발을 하고 있으나 WTO의 허용범위와 국내 농민수요간에는 상당한 제약성이 따를 것이다.

양정의 기본방향이 민간유통기능을 활성화하여 자율시장기능을 통해 양곡의 수급조절과 가격형성기능을 회복하려면 어떤 형태이든 국내생산량을 늘려 공급량이 충분해야 수급에 차질이 없어질 것이다. 민간유통기능이 활성화 되려면 계절 진폭 허용으로 상인참여유도도 중요하지만 생산자나 소비자가 가격수준과 생산방식 및 소비선택이 자유로와야 할 것이다.



권 원 달
충북대학교 농업경제학과 교수

불안한 식량자급률 ... 다수성 품종 재배 바람직

현재의 쌀 자급도로 보면 91년의 102.3%, 93년 96.8%, 94년 87.7%, 95년 91.4%, 96년에는 92.2%로 전망되며 쌀의 연말재고도 91년의 1천4백80만석, 93년 1천2백60만석, 94년 8백만석, 95년 4백70만석, 그리고 96년에는 사상 최소수량인 2백80만석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재고량 감소와 자급률 하락은 국내비축물량 확보와 전체식량수급상에 불안한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최근 생산능기는 양질미 생산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부 양질미 생산지역이외에서도 양질미 생산을 계획하고 있다.

소비자도 양질미를 선호하고 있으나 대다수 소비자는 소득수준에 맞는 쌀구매를 원하는 층도 많다. 따라서 다수확품종을 생산해야 하는 당위성도 제기된다. 통일계 다수확품종은 78년의 식부를 76.2%를 점점으로 점차 감소하여 93년부터 완전히 재배되지 않았다.

대내외적인 양정여건과 쌀자급을 위해서는 적어도 자급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다수확품종 즉, 통일계 벼를 재배하는 것이 국민정서적으로도 바람직할 것이다.

다수확품종이 쌀값이 떨어져도 수량증수에서 농가소득을 보전하거나 최소한 계약재배등 수급조절에 필요한 물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증산정책은 계약재배나 품종, 비료, 농약등 필요한 투입물이 충분히 공급될 수 있고 투입물의 수급조정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농약정보**